

제1044호 2026. 2. 13.

건설동향

BRIEFing

• 건설자재 공사비 리스크 완화 방안

- 2025년 건설투자 27년 만에 최대 폭 감소
- 거시적 요인,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적 고비용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
- 건설자재 선물시장을 통한 리스크 관리 체계 검토 필요

• 2025년 해외건설 수주분석과 2026년 전망

- 해외건설 수주, 472.7억 달러, 2014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지역) 유럽이 201.5억 달러, (공종) 산업설비 부문 352.8억 달러 기록
- 2026년 글로벌 건설시장, 6.8% 성장한 16.2조 달러 전망



건설자재 공사비 리스크 완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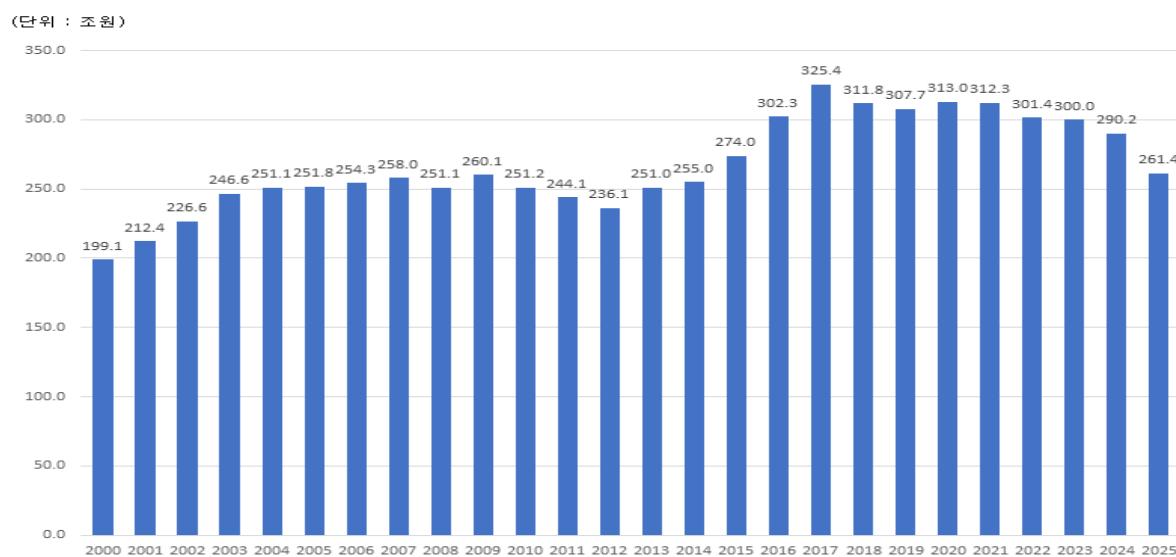
- 건설자재 통합 선구매 플랫폼 도입 방안 모색 -

박철한(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 현황 : 2025년 건설투자 27년 만에 최대 폭 감소

-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의하면, 2025년 실질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9.9% 감소 한 261.4조 원을 기록, 2020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해 장기 침체 국면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투자는 지난 2020년(313조 원)을 기록한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며 건설경기 하강 국면이 고착화되는 양상임.
 - 특히, 이번 9.9% 감소 폭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3.2%) 아래 27년 만에 최대 감소 수치로, 사실상 ‘건설 쇼크’ 수준의 급격한 침체기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건설투자 추이



주 : 2020년 연쇄가격, 원계열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국민소득 속보치(2026.1.22).

원인 진단 : 거시적 요인,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적 고비용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설투자 감소를 심화

● [거시적 및 단기적 요인] 거시적 요인,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적 고비용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설투자 감소를 심화시킴.

- (고금리/고물가 환경)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2020~2022년까지 0.5~1%대 수준의 낮아진 기준금리로 유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높은 물가를 야기, 2023~2024년 3.5%대로 증가하는 등 높은 금리 환경에 처해 차입 의존도가 높은 건설산업 특성상 조달 비용 등이 구조적으로 상승함.
- (시장 침체) 누적된 공급 물량과 수요 위축이 맞물려 미분양 재고가 적체되었는데, 2021년 1.8만 호였던 미분양 물량이 2022년부터 6만 호를 넘어서는 등 전형적인 부동산경기 수축기에 진입함.
- (PF 경색) 부동산 금융(PF) 시장의 보수적 재편으로 금융권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 PF 대출 실행 어려워지고 사업성 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브릿지론에서 본PF로의 전환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의 영향으로 신규 착공이 급감함.
- (정치적 불확실성) 2024년 12월 계엄 사태 및 정권 변동성 등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급격히 악화시킴. 미래 불투명성이 가중되어 민간의 대규모 신규 착공 및 투자 결정이 보류되거나 지연, 결국 2025년 건설투자가 급락한 결과를 초래함.

● [구조적 요인] 고비용 구조 고착화 및 가격 비동조화

- 2000년대 이후 고착화된 건설자재 가격의 비동조화(Decoupling) 현상은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공사비 상승을 초래함.
- 공사비가 상승한 원인이 인건비도 있지만, 자재비 영향이 더욱 큰데¹⁾, 중간재건설용 물가지수²⁾와 생산자물가지수³⁾를 비교한 결과,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건설용 중간재 물가지수가 생산자물가 총지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며 타 산업 대비 원가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고착화된 것으로 분석됨.

● 2020년 이후 발생한 급격한 공사비 변동은 전통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 불가피⁴⁾

- 특히, 2020년 팬데믹 이후 두 지수(중간재건설용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간의 격차가 폭발적으로 확

1) 2020~2025년 수준 비교를 통해 공사비 상승 영향을 2020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비용상승 기여율이, 자재비용 49.8%, 피용자보수 29.2%, 서비스비용 21.0%로 추정됨.

2)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내 공급자 물가지수 중 하나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형태가 변하거나 소모되어 최종 건축물(아파트, 교량 등)에 흡수되는 원자재와 중간 가공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며, 건설산업의 직접 공사비(재료비)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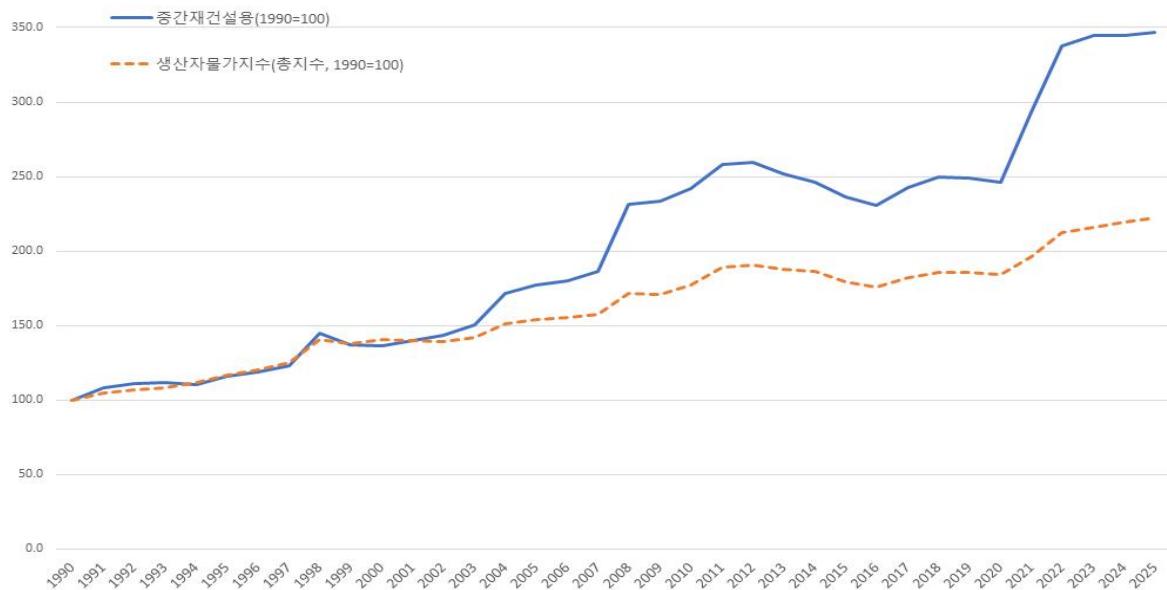
3)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출하(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화를 지수화한 것임.

4) 현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사후 정산 방식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공공사는 예산 불확실성 확대, 행정 부담 증가, 감사분쟁 리스크 증가하며, 민간공사는 공사비 전가 한계, 사업성 악화, 금융조달 차질을 유발함. 특히 급격한 자재가격 상승기에 는 제도 반영 시차로 인해 실제 원가 상승분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됨.

대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리스크 관리 체계로는 통제가 어려운 수준의 ‘공사비 쇼크’가 현실화되었음을 시사함.

-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산업의 수익 모델 자체가 위축되는 ‘비용의 임계점’을 초과했음을 뜻함.
- 산업 생태계 위기 : 통제 범위를 벗어난 공사비 변동은 현장의 공사 중단, 시공사와 발주처 간의 법적 분쟁, 분양가 상승 압력 등으로 이어지며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⁵⁾
- 현행 사후적 계약 금액 조정 방식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 건설공사의 사업성 악화⁶⁾와 공사지연 등을 초래함.

〈그림 2〉 중간재 건설용 물가와 생산자물가 지수 비교



주 : 1990년 수준을 100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비교.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조사.

❸ 대응 전략으로 건설자재 선물시장을 통한 리스크 관리 체계 검토 필요

- 최근 건설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단순한 물가 상승 수준을 넘어, 건설산업 전반의 수익 구조와 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자재비 상승은 공사비 급등, 사업 지연, 민간 투자 위축 등으로 연쇄 확산되며, 산업 전반에 ‘비용의 임계점’ 초과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5) 그 결과, 착공 지연, 입찰 유찰, 공사 중단, 계약 변경 분쟁 등 건설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이 상시화되는 구조적 문제 발생.

6) 공공공사의 경우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공사비를 보전받아 참여 개별 기업의 사업성은 악화될 수 없지만, 전체 예산 총액에 한정성을 고려, 국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비용상승으로 인한 공사 물량 감소 및 지연은 불가피함.

- 기존의 사후적·수동적 관리 방식에서, 금융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과 전략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재 선물시장’ 도입을 검토해 봄.
 - 정책 목표 : 미래 자재 가격을 현재 시점에 확정하여 공사비 변동 리스크를 금융시장으로 이전, 투명한 시장 가격 형성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 제고
 - 핵심 전략 : 선물 거래 도입해 자재 가격 변동성의 경우 금융상품을 통해 흡수, 시장 가격 기반 예산 수립해 불투명한 개별 계약 관행에서 투명한 공개 시장 가격 체계 전환을 유도, 계약 에스컬레이션과 선물 매수의 복합 전략을 통하여 이중 방어체계 구축

해외 건설자재 선물시장 형성 조건 : 자재 표준화 및 내수 거래 규모

- 중국(철근/유리), 미국(목재), 인도(철강) 등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표준화된 자재를 기반으로 선물 시장을 활발히 운영 중임.
 - 중국의 경우 상하이 선물거래소(SHFE : Shanghai Hai Futures Exchange), 정저우 상품거래소 (ZCE : Zhengzhou Commodity Exchange)를 통하여 건설자재 중 철근과 열연강판, 판유리 등이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건설사와 자재 생산자 간에 선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⁷⁾

〈표 1〉 주요 국들의 건설자재 선물시장 활용 사례

국가	주요 거래소	대상 품목	주요 참여자	활용 특징 및 시사점
중국 (활용도 : 최상)	상하이 선물거래소(SHFE) 정저우 상품거래소(ZCE)	철근 유리 열연강판, 시멘트	- 제강사/ 유리 제조사 - 대형 건설사 - 금융 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규모 : 철근 선물이 주식시장만큼 활발히 거래됨. ■ 가격 지표 : 선물 가격이 내일의 현물(도매) 가격을 결정함. ■ 해지 필수 : 건설사는 공사 수주 시 철근 선물을 매수하여 원가 고정.
미국 (활용도 : 상)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Group)	목재 열연강판 철 스크랩	- 주택 건설사 - 재소/ 벌목업체 - 투자은행(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특화 : 목조 주택 비중이 높아 목재 선물이 핵심 지표. ■ 장기 해지 : 대형 주택건설사는 6개월~1년 뒤 지을 집의 자재비를 미리 선물로 매수하여 확정함.
인도 (활용도 : 중)	멀티 상품거래소 (MCX) 국립 파생상품거래소 (NCDEX)	철강 (철근, 형강 등) 비철금속	- 중소형 건설사 - 철강 유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장 시장 : 인프라 개발 붐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선물 시장 활성화를 장려 중.

7) 중국 철근/자재 선물, 상하이 선물거래소 (SHFE) : “Steel Rebar Futures Contract Specifications”, “Monthly Market Data” Reuters/Bloomberg : 중국 철근 선물 가격(Rebar Futures) 및 건설 경기 상관관계 리포트.

- 미국은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Group : Chicago Mercantile Exchange Group)를 통하여 주거용 목재가 선물로 거래됨.⁸⁾
 - 인도의 경우는 멀티상품거래소(MCX : Multi Commodity Exchange of India), 인도국립파생상품거래소(NCDEX : National Commodity & Derivatives Exchange)를 통하여 철강이 선물로 거래가 됨.
- 해외 건설자재 선물시장 운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① 대규모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② 자재 표준화가 선행되고, ③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결합될 때 비로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선물시장 활성화의 핵심 요건으로 풍부한 유동성(대규모 내수), 거래의 투명성(자재 표준화),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한 시장 신뢰성의 3박자가 갖춰지는 것임.

건설자재 통합 선구매 플랫폼 도입의 단계적 접근 모색

- [국내 도입 여건 및 한계 진단] 철근(7대 제강사), 시멘트(5~6개 사) 등 소수 공급자체계와 분산된 다수 수요자 구조로 내수 시장 규모가 협소해 투자자 유입 및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자재 특성상 보관·운송 부담과 비표준화되어 높은 비용이 발생함.
 - 유동성 및 표준화 부족, 내수 시장이 작아 투자자 유입이 어렵고, 자재의 물리적 특성(부식, 경화 등)과 비표준화로 인해 실물 인수도 및 보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
- 따라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표준화가 가능한 품목에 한해서 공공 주도의 ‘시장 조성형 단계 전략’이 불가피함. 실물 인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화 전략’과 ‘정부의 시장 조성’ 역할이 필수적⁹⁾
- [1단계] 가칭 ‘건설자재 통합 선구매 플랫폼’ 기반 ‘장외 선물시장’ 조성
- (개념) 건설자재 통합 선구매 플랫폼은 공공 부문의 확정된 미래 수요를 통합·선발주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시스템으로, 자재 선물시장의 ‘기초 자산’을 제공하고 제조사의 ‘공장 가동’을 보장하는 역할 수행
 - (주요 내용) 건설자재 통합 선구매 플랫폼 시범 가동 : LH·GH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시범 단지 지정, 철근·레미콘 등을 통합 선구매, 공공이 시장 조성 역할 수행 → 초기 시장 유동성 인위적 창출

8) 미국 목재 선물 : CME Group (시카고 상업거래소) : “Lumber Futures (LBS) Fact Card”, “Hedging with Lumber Futures”.

9) 공공공사에서 일부 자재를 조달하는 방식 중,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관급 자재 거래 방식이 있는데, 품목이 중소기업 제품에 한정되었으며 이 방식은 선물과 선구매 방식이 아닌 ‘장기 단가 계약’ 방식으로 하자 책임 소재의 불분명과 납기 지연 문제로 인한 한계를 내포.

● [2단계] 표준화 상품 기반 선물 거래 활성화 확대

- (역할) 공공 발주 계약의 일정 물량을 거래량과 표준화 가능성이 높은 자재를 중심으로 선도 계약 구조로 전환
- (주요 내용)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통합 발주 → 상품성 확보 및 거래량 확대
-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국가 주요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강화

● [거버넌스 및 주체별 역할 체계] 정부·금융·자재·시공 등 4대 주체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 필요

- 정부 : 시장 조성자, 지수 신뢰 보증, 공공 물량 배정 역할 수행
- 금융권 : 선물·옵션 상품 개발, 유동성 공급 역할
- 자재 생산자 : 선물 매도 → 판매 단가 고정, 생산 안정성 확보
- 건설회사 : 선물 매수 → 원가 방어, 예산 안정성 확보
- 보완적으로 가격 급등 시만 보상받는 옵션·보험 등을 병행, 안정성 확보

구조적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

● 지난 5년간 침체는 단순한 불황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봐야 할 것이며, 고비용 구조의 고착화와 가격 비동조화로 인한 ‘구조적 복합 위기’로 볼 수 있음.

● 구조적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 혁신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 공학적 선물시장 도입도 함께 고려해야
- 금융으로 불확실성을 통제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임.
-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성을 강화한다면, 건설산업뿐 아니라 국민 경제의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변화를 이끌 정부의 결단과 ‘마중물’ 역할과 전략이 중요함.

- 지금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 무엇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2025년 해외건설 수주분석과 2026년 전망

- 2014년 이후 최고치 기록, 2026년 시장은 전환기적 확장 단계 진입 -

손태홍(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 thsohn@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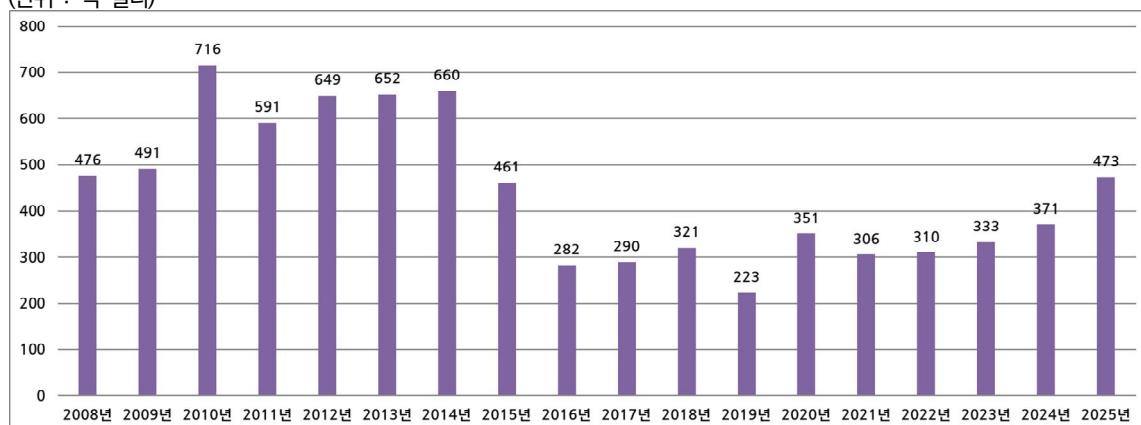


2025년 해외건설 수주, 472.7억 달러로 2014년(660억 달러) 이후 최고치

- 2024년 371억 달러를 기록하며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돌파한 해외건설 수주는 2025년에도 전년 대비 27.4% 증가하며 성장세를 유지함.
 - 254개 기업이 107개국 건설시장에서 589건의 사업 수주를 통해 거둔 2025년의 성과는 2022년(310억 달러)부터 4년 연속 증가한 실적이며, 누적 규모는 1조 482억 달러임.
 - 해외건설 수주가 급감했던 지난 2016년(282억 달러)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수주는 326억 달러이며, 2020년대로 범위를 좁혀 보면 357.3억 달러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1〉 2008~2025년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자료 : OCIS,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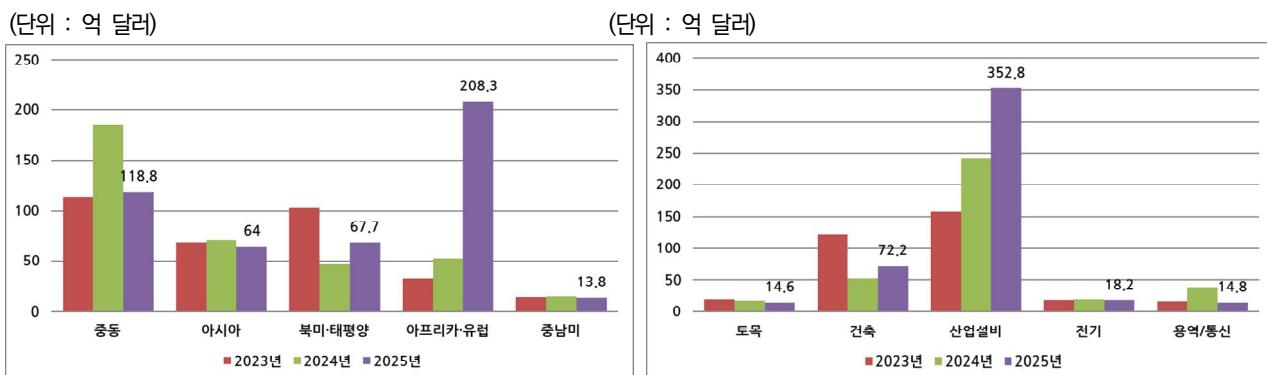
- 수주 형태별로는 원청단독 사업이 378.3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80.0%를, 원청합작 사업이 90.3억 달러로 19.1%를, 하청단독 사업이 3.5억 달러로 0.7%를 차지함. 지역별로 보면 원청단독 사업(378.3억 달러) 중 유럽이 192.7억 달러로 전체 수주 실적의 50.9%를, 중동이 85.8억 달러로 22.7%를, 태평양·북미가 59.4억 달러로 15.7%, 아시아가 35.6억 달러로 9.4%를 차지함.

- 발주형태별로는 도급지명 사업이 228.7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48.4%를 기록했으며, 도급공개 사업이 114.7억 달러로 24.3%를, 도급수의가 111.7억 달러로 23.6%를 차지함. 도급지명 사업 수주를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196.1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85.7%를 차지했으며, 중동(13.8억 달러)이 6.0%를, 아시아(9.8 억 달러)가 4.3%를, 태평양·북미(6.9억 달러)가 3.0%를 차지함.
-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구분되는 개발공개·지명·수의 사업 수주 실적은 17.6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3.7%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4년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실적(51.6억 달러)의 34% 수준임.

지역별로는 유럽이 201.5억 달러,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부문이 352.8억 달러 기록

- 지역별로 보면 유럽과 아프리카, 태평양·북미 지역의 수주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에 중동과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의 수주 실적은 감소함.
 - 유럽 지역의 수주는 전년과 비교해 298% 증가하며 전체 수주 실적의 42.6%를 차지했는데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증가세는 체코 원전 사업(187.2억 달러) 수주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럽 비중은 전년과 비교해 보면 29.0%p 증가한 것임.
 - 주력 시장인 중동 지역의 수주(118.9억 달러)는 전년 수주 실적(184.9억 달러) 대비 35.8% 감소하며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9.8%에서 25.1%로 축소됨. 수주 주요 사업으로는 이라크 바스라 해수처리 시설(31.6억 달러), UAE 메탄올 플랜트(16.9억 달러), 사우디 복합화력발전소 3건(총 21.5억달러) 등이 있음.
 - 국가별로는 체코가 187.2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39.6%를 차지했으며, 미국과 이라크가 각각 57.9억 달러(12.3%)와 34.6억 달러(7.3%)로 2위와 3위를 기록함. 누적 수주 규모로 국가별 순위에서 1위인 사우디는 28.5억 달러로 6.0%에 그치며 5위를 기록함.
- 공종별로 보면 산업설비 74.6%, 건축 15.3%, 전기 3.9%, 토목 3.1% 순
 - 산업설비 부문은 발전(원자력, 화력, 태양광), 화학(메탄올, 암모니아)·가스 플랜트 등 352.8억 달러를 수주하며 전년(243.0억 달러)과 비교해 45.2% 증가함. 특히, 산업설비 중 발전소 공사 수주액은 240.1억 달러(산업설비 전체 수주액의 68.1%) 28.8억 달러를 기록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건축부문은 미국, 인도, 브라질 등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가전 등 제조시설 사업, 싱가포르 병원 및 UAE 오피스 사업 등을 수주하며 전년(52.4억 달러)과 비교해 37.9% 증가한 72.2억 달러를 기록함.
 - 카타르, 호주, 사우디 등에서 9.6억 달러 규모의 송전사업과 호주 및 미국 BESS 사업(6.8억 달러) 등의 수주를 통해 총 18.2억 달러를 기록하며 3.9%의 비중을 차지함. 전기 부문의 비중이 3대 공종 순위에 포함된 것은 1985년(9.8%) 이후 처음임.
 - 토목 공종은 신규 수주액 3.3억 달러, 기존 수주 사업의 증액 등을 반영해 총 14.6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연간 수주액의 3.1%를 차지하는 데 그쳤을 뿐 아니라 감소 추세도 지속되고 있음.

〈그림 2〉 2023년~2025년 지역별(좌) 및 공종별(우) 해외건설 수주 추이



자료 : OCIS, 해외건설협회

2026년 글로벌 건설시장, 지난해와 비교해 6.8% 성장한 16.2조 달러 전망

- 글로벌 건설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성장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각국의 공공투자, 신산업 확대 등으로 향후 점진적인 성장세 기대됨('25.7월).
 - '24년 글로벌 건설시장 규모는 약 14.6조 달러로 '23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25년은 전년 대비 5.1% 성장해 15.3조 달러로 전망되며, 2026년에도 글로벌 건설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건설시장은 '21~'25년 연평균 3.9%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향후 '26~'30년에는 연평균 6.0% 이상의 높은 수준의 성장세가 기대됨. 성장 요인으로 ① 주요국(미국, EU, 중국 등)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② 기후·첨단기술·도시화 수요에 따른 신산업(스마트시티,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등) 확대 등임.
 - 반면, ①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②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및 지속, ③ 트럼프 정부의 관세 기반 통상무역정책에 따른 영향 등은 시장의 하방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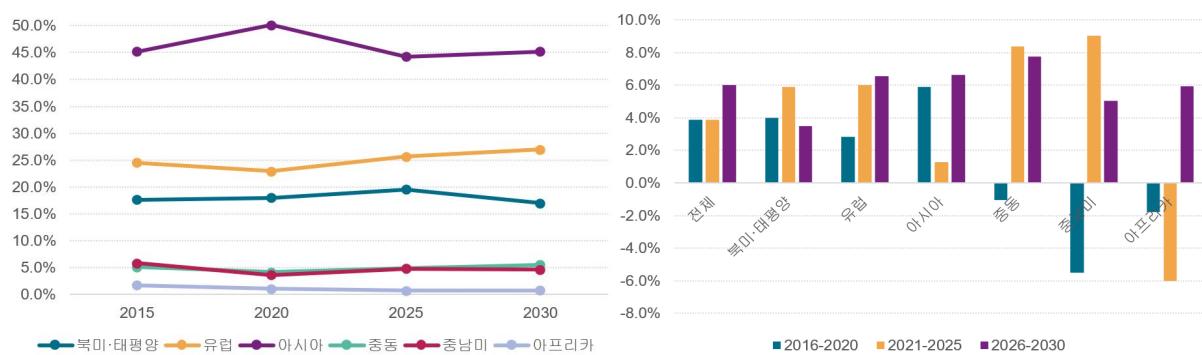
〈그림 3〉 글로벌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자료 : IHS Markit('25.7)

- 지역별로 보면 중동과 아프리카가 두 자릿수 성장률(각각 11.0%와 11.5%)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4.3조 달러)과 아시아(7.1조 달러) 지역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70.6% 차지할 것임.
 - 향후 지역별 건설시장의 연평균 성장률('26~'30년)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가 높은 성장률(6.6%)로 시장을 견인하고, 중동(7.8%), 유럽(6.5%)도 글로벌 평균(6.0%)을 상회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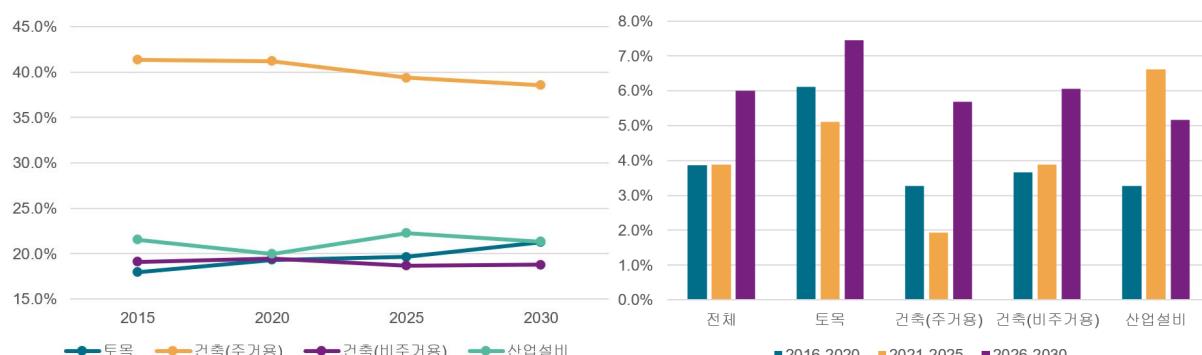
〈그림 4〉 지역별 건설시장 비중 추이 및 연평균 성장률 추이



자료 : IHS Markit('25.7)

- 향후 공종별 건설시장 연평균 성장률('26~'30년)은 교통·상하수도 중심의 토목 부문이 높은 성장률(7.4%)로 시장을 견인할 전망임. 이어 전체 글로벌 건설시장의 18~20%를 차지하는 비주거용 건축부문이 6.1%씩 성장하면 글로벌 평균을 상회할 전망임.
- 도시화, 기후 대응 및 사회적 인프라 수요로 인해 토목 부문은 가장 견조한 성장 부문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원자재 관세 인상, 경기둔화, 기업 투자 및 고용 불확실성 등 수요 위축으로 건축·산업설비 부문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그림 5〉 공종별 건설시장 비중 추이 및 연평균 성장률 추이



자료 : IHS Markit('25.7)

2026년 글로벌 건설시장은 섹터 및 지역별로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나는 ‘분절된 회복(Divergent Resilience)’ 양상 보일 전망

- 섹터별 시장에서는 ‘에너지’가 키워드로 관련 부문 투자 확대가 글로벌 건설시장의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저탄소 에너지 전환 수요 증가, 산업생산 증가와 도시화 확대로 인한 전력 소비량 증가, 지속가능한 저탄소 발전 방식에 대한 수요 등은 글로벌 건설시장의 긍정적 영향 요인임.
 - Bloomberg NEF 분석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에너지전환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2.3조 달러를 기록함. 2026년에는 단순한 투자 규모 확대를 넘어 회복력(Resilience)과 산업 경쟁(Competition)이 핵심 테마로 부상하고 있음.
 - 과거의 선언적 목표(Net-Zero)보다는 실제 전력망 구축, 공장 건설 등 실행(Execution) 중심의 투자가 주를 이루면서 투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2026년에도 청정에너지 공급 투자는 화석 연료 투자를 앞지르며 그 격차는 약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벌어질 전망임.
 - (신재생에너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통합 단계로 진입할 것임. 태양광의 경우 중국의 보조금 정책 변화와 공급 과잉 조절로 인해 신규 설치 증가세가 전년 대비 소폭(10% 미만) 둔화될 전망이나 성장세는 유효함. 풍력 부문은 해상 풍력의 공급망 이슈가 일부 해소되면서 서유럽과 인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등이 예상됨. 2026년은 배터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ESS 설치량이 사상 처음으로 100GW를 돌파하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임.
 - (원자력) AI 및 데이터 센터의 슈퍼사이클에 따른 지속 가능한 전력 확보와 글로벌 에너지 전환(Transition)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문제 해결 필요성이 커지면서 원자력 르네상스가 본격화되고 있음. 현재 58기(60GW 규모)의 대형 원자로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전체 원자로의 66%가 30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원전 발주는 확대될 것임. 원전 발전량은 2023년 기준 2,765TWh에서 2030년엔 3,887TWh로 4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규모 원전(SMR) 시장 규모는 ’27년 104억 달러에서 ’40년 3,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임.
- 2026년은 기회(AI, 에너지전환 등)와 위기(공급망 불안, 공사비 상승 등)가 공존하는 해로 지역 및 상품별 성장세가 차별화된다는 점을 고려, 기업은 선택과 집중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성 제고, 현지 조달 비중 확대를 통한 ‘후회 없는(No-regret)’ 공급망 관리, 인력 확보 및 유지, ESG 및 규제 선제 대응 등의 전략적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산업 스마트 시티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인프라 협력 외교를 강화하고,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에 따른 기존 지원 정책(초기 타당성 조사, 인프라 펀드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야 할 것임.